

## 지역대학 중심 교육기부의 필요성과 과제

강이화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본 Issue Paper는 2023년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음
- 원고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센터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방법 .....	3
<b>II. 대학 교육기부 관련 이론적 고찰</b> .....	<b>5</b>
1. 교육기부와 정부 정책 동향 .....	5
2. 교육기부 사업의 확장과 특징 .....	9
<b>III.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교류의 필요성</b> .....	<b>13</b>
1. 대학과 지역 간 교류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	13
2.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협력 방안 .....	18
<b>IV. 지역대학 중심 교육 기부의 과제</b> .....	<b>21</b>
1. 자율성을 포함한 교육기부의 운영 원리 정립 .....	21
2. 교육기부 참여자 확대 .....	21
3. 늘봄학교의 연계된 교육 기부 운영 대학체제 정립 .....	22
4. 지역대학 중심 지자체-교육청 컨소시엄 운영 .....	2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외치며, 우리나라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학생 자신에게는 개개인에게 맞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받게 하고 사회에게는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자 학교라는 울타리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학교를 둘러싼 온 마을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고 학생에게 보다 넓고 깊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학교를 둘러싼 공동체에는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수많은 단체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학교급의 학교와 함께 대학이 있다.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란 교육적 공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산을 조건과 대가 없이 나누어주는 행위로, 최근에는 개인적 행위를 넘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된 개념이다(<http://www.teachforkorea.go.kr>).

교육부는 교육기부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고시하였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이는 교육기부를 유도하고 우수기관을 인증하여 바람직한 교육기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교육기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부터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인증 심사를 거쳐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하였다.

이 때의 교육기부는 기업·대학·출연(연)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교육부, 2020), 교육의 핵심가치를 미래인재에게 심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기부 공급자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단체, 협회, 개인, 대학생 등 다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형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물, 시설, 기자재 등의 물적 자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고(이영, 2012), 이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교육기부센터’로 지정하고 교육기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교육기부 콘텐츠를 소개하는 행사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와 함께 교육기부 참여와 활성화를 다짐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이후 교육기부의 중요한 두 주체인 기부자와 수요자 간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고 세부 기부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전체 교육기부 활동을 체계화하여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을 오픈하고 운영 중에 있다.

교육기부와 관련된 연구를 탐색해 보면, 우선 장신호(2011)는 교육기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운영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조현준 외(2011) 및 김이성 외(2012)와 최유현 외(2013)는 교육기부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최인숙(2013)은 학부모 교육기부에 대한 참여 예측 요인을, 정숙희 외(2020)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조순이(2012)는 문화예술 교육기부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혜학생에 대한 효과성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창의성, 협동심, 사회성 함양과 같은 인성적인 측면(송경희, 2013)과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김윤정 외, 2016)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다. 또한 문화 예술분야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의 정서적 적응영역 부분에서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 행동적·개인적 적응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안지현, 최유미, 2014).

유효숙(2011)은 과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탐구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성 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김미아와 이상봉의 연구(2015)에서는 기술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등학생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기부가 학생들의 학교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 외에도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창의성, 생활 만족도, 학교 적응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임승희, 김소영, 이유리, 2013), 교육기부가 수혜 학생들에게 학습내재적 동기,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기술, 자기통제력, 진로정체성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김세현, 박선웅, 2019).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중반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맞물려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대학 특히 지역의 국립대학이 교육기부에서 갖는 의미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고등교육 분야는 국제적 위기와 함께 국내 문제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수요와 대학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는 지금까지의 대학에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을 교육해야 하는 기능과 새로운 지식 및 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에 질적인 도약을 기대 혹은 요구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은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한정되어 있어 국내 대학 특히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우선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물적 인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기부의 지역거점의 토대를 체계화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기부 대상의 요구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교육기부 관련 개념 정리와 관련 정부 정책의 현황,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교류의 중요성과 교류협력 방안, 지역대학 중심 교육 기부의 과제라는 주제를 탐색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 가. 연구 문제

이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기부 관련 개념 정리와 관련 정부 정책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교류의 중요성과 교류협력 방안은 어떠한가?, 셋째, 지역대학 중심 교육 기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 나.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교육기부 관련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정책 문서, 관련 학술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주제영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II. 교육기부 관련 이론적 고찰

### 1. 교육기부 관련 정책 동향

#### 가. 교육기부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의 교육기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기업·대학·출연(연)·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물적 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신호, 2011; 김민희, 2018: 654 재인용).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기관 보유시설·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부에서부터 장비나 콘텐츠의 제공 또는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 강연, 멘토링, 지식봉사 등의 개인 재능기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 논의된 교육기부의 유형은 대상자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II-1〉 교육기부 유형

형태 대상자	통합(인적+물적)	인적자원	물적자원	현금	현물	노하우
국가·지역사회	교육파트너십			기부금	컨텐츠·기자재	
학교	학교설립·운영			기부금	컨텐츠·기자재	교육파트너십
교사	연수				컨텐츠·기자재	
학생	체험활동·진로교육	개인교습·돌봄	학습관	장학금	컨텐츠·교육물품	

출처 : 김민희(2018). p.657 표 재인용

김윤정 외(2016)는 교육기부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관이 보유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적 기부, 두 번째 유형은 장비나 콘텐츠의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기부, 세 번째 유형은 개인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연이나 멘토링 등의 기부이다. 교육부는 교육기부를 보다 세분화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으로 문학, 예술, 체육 교육과 멘토링, 자원봉사 등 개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기부 지역센터', '체육예술 거점대학',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기부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전국을 3개 권역(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대학 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교육기부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센터가 해당 지역의 교육기부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센터 주관 연구기관은 KAIST, 한동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대학이며, 운영기간은 일시적이며 사업 재수행 여부를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선정은 용역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평가에 의해 사업승인과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업계약이 이루어지면 대학의 연구사업단이 권역 중심의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센터별로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 나. 교육기부 관련 우리나라 정책 동향

우리나라에서 교육기부 정책이 실시된 것은 교육부가 2010년에 교육기부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교육부는 교육기부를 기업 대학·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교육기부 참여기관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편, 2011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기부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기부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했고, 창의융합형, 미래진로형, 문화예술형 교육기부 컨설팅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매년 교육기부박람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학생 교육기부단을 창단하여 전문가와 함께 창의인성 교육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 교육기부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고 대학생 교육기부 홍보 및 신규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지원하였다(교육기부 포털, 2020). 2014년부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성에 의해 교육기부 지역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개인, 기업, 기관 등의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선정하여 모델학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발굴·매칭하는 것이다(교육부, 2014).

2015년에는 교육기부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퇴인력을 포함한



개인교육기부단을 출범하였고, 테마별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였으며(교육부, 2015), 2016년에는 체육·예술분야의 교육기부활동의 확산을 위해 체육예술거점대학을 선정하여 교육청-단위학교-지역사회 체육·예술 협업 네트워크 구축하고, 체육·예술 분야 대학생 동아리 발굴 및 단위학교와 매칭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2016).

2020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부사업단인 교육기부 지역센터, 교육기부 컨설팅단, 체육예술거점대학과 대학생 교육기부단 및 개인교육기부단의 주요 역할은 아래의 <표 II-2>과 같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란, 교육기부의 현장 우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지원 강화 및 교육기부를 활용한 미래형 초·중학교 모델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이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통해 2016년 교육기부 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중 권역별로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2017년도부터 교육기부 모델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권역별 5개교 이상의 단위학교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5차시 이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여러 사업단을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교육기부 제공자 및 학교 현장 연계를 위해 교육기부의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통해 다위하고 내 교육기부 자원 투입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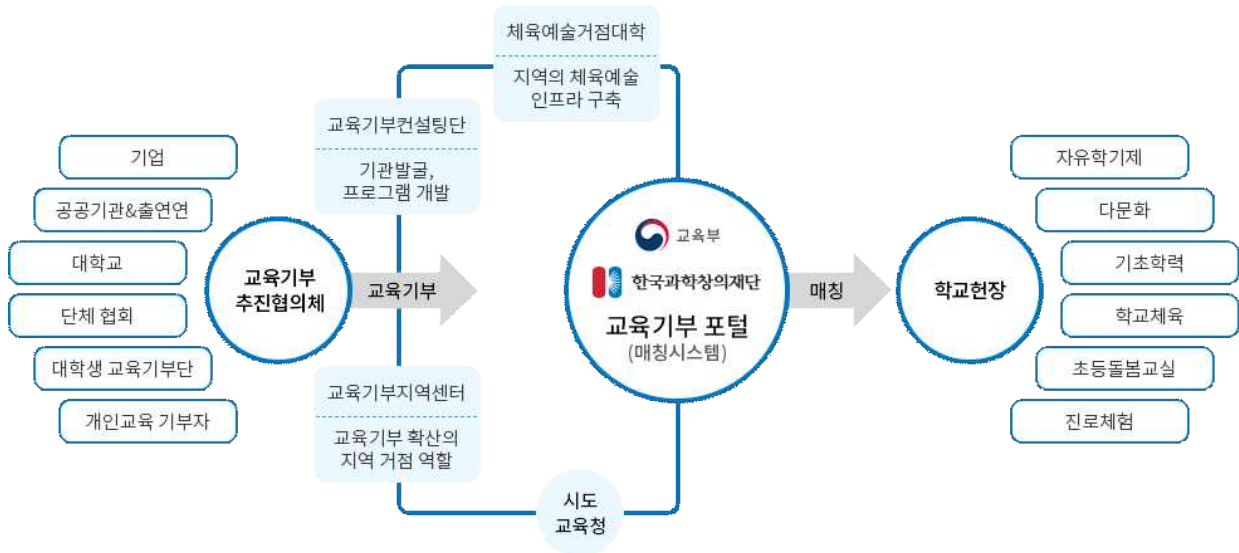
**<표 II-2> 교육기부 유형**

사업단		주요역할
교육기부 사업단	교육기부 지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기획</li> <li>- 지역 교육기부자원이 투입된 단위학교의 성공적 수혜사례 도출을 위한 교육기부 모델 학교 운영</li> <li>- 지역 내 특색 있는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단위 개인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li> </ul>
	교육기부 컨설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부 참여(예정)기관별 운영방침, 기업의 가치 등을 고려한 기관의 교육기부 방법,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컨설팅</li> <li>- 교육기부 기관 특성 및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li> <li>- 교육기부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적용 결과 분석, 만족도 조사 실시</li> </ul>
	체육예술교육 기부거점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단위학교-지역사회 체육·예술 협업 네트워크 구축</li> <li>- 체육·예술 분야 대학생 동아리 발굴 및 단위학교와 매칭 지원</li> <li>-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렉처 콘서트' 및 '체육·예술 교육기부 토크콘서트' 운영</li> <li>- 체육·예술 전문 개인 교육기부 자원발굴 및 지원</li> </ul>
대학생 교육기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를 모집·심사·선정하고, 활동지역 차별화를 통해 소외지역 학교에 교육기부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 추진</li> <li>- 교육·복지·정책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생 교육기부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 구축</li> <li>- 국내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li> </ul>	

사업단	주요역할
	대상 특성화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시설(복지센터·아동센터 등)을 매칭하여 지자체 연계 교육기부운영, 교육기부의 지역사회 공헌 부분 강화 - 교육기부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박람회, 대학생 교육기부 토크데이 등을 운영하여 네트워크 구축
개인교육기부단	-교육운영 전문성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 모니터링, 개인교육기부자 간 소통을 위한 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기부 참여 독려

출처 : 정숙희, 신운유, 이주은(2020). p. 239-240 표 재인용.

우리나라의 교육기부는 법률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행 교육기부 관련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시행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기부와 유사한 법은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운영 체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II-1] 우리나라 교육기부 운영 체제

#### 다. 우리나라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도

인증제이란 해당 분야에 권위를 가진 기관이 특정 제품, 프로그램, 기관 또는 개인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또는 수준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인증의 유형은 프로그램 인증, 기관 인증, 개인 활동 실적 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인증은 특정 프로그램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구안 제작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만장일치로 인정해주는 인증제도로 KS 마크, Q 마크 등 품질인증 마크, 우수여행상품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등이 있다. 둘째, 기관 인증은 특정 프로그램,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기관의 운영시스템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입증하는 인증제도로 우수평생교육 기관인증, ISO 인증 등이 있다. 셋째, 개인 활동 실적 인증은 개인의 활동참가 실적이나 성취수준 혹은 개인의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대한민국 명장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기업, 공공기관, 대학(직능단체 포함, 대학생 동아리의 경우 20인 이상일 경우 해당)이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의 자격은 각 기관이나 동아리가 보유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초·중등교육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절차는 기관과 대학생 동아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두 대상의 조직, 규모, 활동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대상 기관의 선정방법은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심사기준은 수행역량 및 프로그램 운영의 두 영역별 지표에 따라 심사한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교육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가 지급된다. 또한 교육기부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우수교육기부 기관으로서 기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부 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하며, 교육기부 사이트(<http://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매월 12월 교육기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생 동아리는 1년, 기관은 3년 시점에서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정문성, 전영은, 2014: 177-179).

## 2. 교육기부 사업의 확장과 특징

### 가. 교육기부 지역센터와 센터별 사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부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센터별 사업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개 지역센터에서 총 23개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514회 교육을 운영하였고 모델학교 수혜 인원이 14,105명이었다. 아래 <표

II-3>를 살펴보면, 충청·강원권 센터가 모델학교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교육기부자원을 발굴하였고, 17명의 개인교육 기부자를 모집하였다. 경상권은 각각 7개 모델학교 운영, 8개 교육기부자원 발굴, 16명의 개인교육 기부자를 모집하였으며 전라·제주권은 8개 모델학교, 26개 기부자원, 17명의 기부자를 모집하였다. 지역센터별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창의융합형’, ‘미래진로형’, ‘문화예술형’ 등 맞춤형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II-3〉 지역센터별 사업운영 현황

권역	모델학교 운영	모델학교 운영 차시	모델학교 수혜인원	교육기부 자원 발굴	개인교육 기부자 모집
충청·강원권	8	233	5,261	7	17
경상권	7	126	5,846	8	16
전라·제주권	8	155	2,998	26	17
합 계	23개	514회	14,105명	41	50명

출처 : 정숙희, 신은유, 이주은(2020). p. 239-240 표 재인용.

체육예술 중심 프로그램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권역 중심의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은 권역별로 충청·강원권은 춘천교육대학교, 경상권은 경남대학교, 전라·제주권은 조선대학교로 거점대학이 주도적으로 체육예술분야 대학생 동아리를 발굴하고 학생들과 수혜학교를 매칭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 및 명인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표 II-4>에 의하면 2018년도 체육예술 전공 대학생동아리의 경우 충청·강원권은 17개, 경상권은 19개, 전라·제주권은 15개를 운영하였으며, 활동은 각각 81회, 85회, 24회를 실시하였다. 체육예술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55개 학교 총 2,673명의 학생들이 기부 수혜를 받았다.

〈표 II-4〉 체육예술 전공 대학생 동아리 활동

권역	대학생 동아리 수	활동 횟수	수혜학교 수	수혜학생 수
충청·강원권	17	81	20	991
경상권	19	85	19	632
전라·제주권	15	24	16	1,050
합 계	51개	190회	55개	2,673명

출처 : 이건, 이석민(2020). p. 56 표 재인용.

대학생 교육기부 활동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소개하면, ‘합성소리’, ‘알락달라 행복한 교실’, ‘쓱쓱 캠프’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합성소리는 ‘합성소리’는 학기중 주말에 인근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8주 이상 실시된다.

‘알락달라 행복한 교실’은 인근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8주 이상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쓱쓱캠프’는 방학 중 2박 3일간 대학생들이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집중캠프 프로그램이다.

〈표 II-5〉 대학생 교육기부 활동 프로그램 현황

구분	합성소리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이야기)	알락달라 행복한 교실 (알아가는 즐거움(락樂)달성하는 즐거움(락樂))	쓱쓱캠프 (Story of creativity, story of camp)
운영 시기	학기 중 매주 토요일 (총 8~10회)	학기중(평일) 방과후 운영 (총8회~10회 이상)	방학중 방과후 운영 (2박 3일)
‘18년 실적	106개 동아리 100개 초등학교	77개 동아리 76개 초중학교	398개 동아리 396개 초중학교

출처 : 이건, 이석민(2021). p. 56 표 재인용.

교육기부에 대한 유형 중 대학 및 기업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체험, 실습 등의 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자원을 기부하는 프로그램 운영 유형이 있다. 또한 실험기자재 또는 운동기구, 예술 작품 등을 임대 및 무상제공 하는 시설·기자재 기부 유형이다. 다음으로는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차량, 보험, 인력 제공 등의 활동지원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영화, 예술작품 등의 콘텐츠 제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10; 김덕중, 2016 재인용; 박선웅, 양은주, 2015 재인용).

## 나. 교육기부의 효과성

교육기부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실증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는 자발적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에 관한 연구와 기부 프로그램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를 파악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자에 관한 연구로, 박미경(2001)은 중학생 1,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참여 전·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자원봉사 참여 전보다 자원봉사 참여 이후에 여러 긍정적인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박인심(2014)은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직을 이수한 예비 교사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학교현장 이해, 자신감, 책임감 등이 증대되었음을 밝혔다. 김미아, 이상봉(2015)은 기술체험 교육 기부활동이 학교 행복감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기술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도서관, 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교육기부를 실시한 이후에 자기효능감, 학습활동의 즐거움, 행복감 등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증명하였다. 조아미(2008)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은 평가 기준이 ‘도덕성’과 ‘이타성’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김세현, 박선웅(2019)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동아리 기부 프로그램인 ‘알락달락’, ‘합성소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정서변화를 측정한 결과 내재적 동기,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자기통제력, 진로 정체성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수혜자 관점에서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로, 송경희(2013)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수행하는 ‘온드림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들의 개선도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자기개발, 학교생활, 외부활동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의 교육효과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동아리 학습장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온드림스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웅, 양은주(2015)와 김윤정 외(2016)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기부자와 수혜자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박선웅, 양은주(2015)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알락달락’과 ‘쑥쑥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기부자인 대학생들은 일정 기간 이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갈등관리, 공감적 관심, 참여의식과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었다. 또한 수혜자들인 중학생들도 7주 후에 내재적 동기,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자기통제, 진로정체성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김윤정 외(2016)는 기부자와 수혜자 관점에서 효과성을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및 청소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나타났다.

### Ⅲ.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교류의 필요성

#### 1.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국내외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요구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으면서 대학의 목적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대학이 상아탑에만 갇혀 있을 수 없으며, 책무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뜻한다.

특히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사회로부터 대학개혁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대학의 대·내외적 역할과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 협력하는 역할이 대두되는 등 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해 가고 있다.

나아가 대학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학교급 현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김안나 외, 2003). 사실 1960, 70년대에는 대학이 세계적으로 사회변화의 주된 수단으로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각국에서는 대학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대학의 통폐합과 정원감축, 교육과정의 혁신, 기업가적 대학 운영 등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령인구의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기대 변화,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 국가 간 활발한 교류 등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경쟁 체제에 돌입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대학들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지만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는 소홀히 하고 있다(안영진, 2005: 71).

이러한 위기 속에서 최근 여러 선진국들은 사회변동과 산업 개편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에 발맞춰 대학과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연계 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학이 산학협력에 참여하거나 신제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공원이거나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대학은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신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혁신센터로 부각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대학이 보유한 도서관이나 전산 설비, 체육 및 의료시설 등을 대학 구성원의 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Giese, 1987; Fromhold-Eisebith, 1992; Luger et al., 1997; Blume et al., 2000; 안영진, 2005: 72 재인용).

이에 대학은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대학과 지역을 긴밀히 결합시킬 수 있는 여러 장치와 통로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친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며, 그중에서도 대학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떤 부문보다 거세다. 세계 각국의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 존립 근거를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9세기에 들어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본격 출범한 대학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엘리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 진학률이 학령인구의 15%를 넘어 40~50%에 육박하는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최근에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보편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자연히 대학은 고등교육 수요자의 확대와 이들의 갖가지 요구에 부응하되 각각의 위상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비전을 설정, 추진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주된 기능은 대학의 발달 과정에서 정착된 이래, 그 강조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적잖게 변화해 왔다. 서구의 경우 중세 시대에 대학이 처음 등장한 이래 대학은 '대학혁명'(academic revolu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차례의 변혁을 겪었다.

그 첫 번째가 대학의 주된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로 옮겨진 19세기 초엽의 대학혁명이고, 두 번째가 냉전시대 이래 교육과 연구 외에 사회봉사나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삼기 시작한 대학 혁명이다. 먼저 독일과 영국 등 일찍이 대학 제도가 발달해 온 서구 국가에 있어서 초기 대학의 목적은 교양 있는 엘리트 계층의 교육에 있었다. 이러한 서구 대학의 이념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세기 초 베를린대학과 같은 독일의 대학들이 교수의 연구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이는 '연구와 교육은 하나' 또는 '학문을 통한 교육'이라는 이념, 즉 학문을 가르치는



것(교육)은 학자의 연구 과정과 연결되어야 하며, 또 연구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대학들에서는 교수의 연구는 학부 강의보다 더 중요한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고, 교수의 승진과 임용에서 논문출판 실적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받고, 교수의 자문 활동, 위탁연구, 대학 졸업생의 취업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이 사회와 기업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연구대학 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는데, 물론 이들 국가에서 대학의 성격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통합은 서로 달랐다.

예컨대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한 연구'라는 독일 대학의 연구모델을 미국에 정착시킴으로써 미국식 연구중심대학 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전파시켰다. 그러나 지식의 체계적인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를 통해 생산된 지식이 사회에 실용성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의 기초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대학의 연구 기능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학 연구의 실용적 가치 또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이 산출하는 지식을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흥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함에 따라 지식 생산자로서 대학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발전의 공헌'이 대학의 새로운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2차 대학혁명은 산학협동의 활성화, 기업-대학-정부의 관계 변화, 사회변동과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최근 대학의 세 가지 임무(교육, 연구, 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대표적 아이디어가 기업가적 대학인데, 이는 대학이 마치 혁신적 기업가처럼 행동하면서 자원을 동원·배분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적 대학은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대한 대학의 수동적 반응과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대학의 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고 학문 후속 세대 또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곳이자 지식경제의 중심지로서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발전에서의 기여, 사회봉사 등

사회적 가치는 대학을 평가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래 교육과 지식을 재생산하는 단일 공동체를 뜻하는 대학(university)이 고도 산업화와 전문화, 지식정보화, 거대화의 물결 속에서 다원적인 다기능대학, 복잡한 조직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변모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 평생학습, 전문직업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국제교류를 통한 대학의 세계로의 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 거대화, 대중화, 다원화, 다기능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통합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필수적이다(김호진, 2001; 안영진, 2005: 78 재인용).

오늘날 대학을 대학이 소재한 도시나 지역사회 와 분리될 수 없는 조직체이자 거점기관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학은 학문 탐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화 창달과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학의 사회봉사의 일차적 장소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과 지역발전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강조는 대학과 지역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적, 행정적, 교육적 상황 조건의 변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히 관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 (Goddard, 2000; Charles, 2003; 안영진, 2005: 79 재인용). 첫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노동력의 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에 기반을 둔 한 연구개발로부터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적극 활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 기반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는 대학이 창출하고 개발하는 지식과 기술에의 접근 여부는 잠재적으로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번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체는 물론이고 대학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대학의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은 보다 나은 학생을 충원하거나 지역의 기업들과의 각종 협약이나 자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중요한데, 현재 세계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지방자치제의 실시나 지방분권의 확대 등 지방화의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필요성에 대응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은 각종 국가발전 전략과 계획의 기본 단위로 다시금 부상하고 재흥을 맞이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존 하드웨어의 기반 위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관 학연 등 연계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역량을 네트워킹하여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문화 육성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화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지원체계도 지역의 제도적 역량과 내생적 발전에 점점 초점을 맞추어져 가고 있다. 대학도 자연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의 우선순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구조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창의적 지식을 중요시하고, 지식정보의 변화 속도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성격 변화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유연하게 습득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높여 왔다. 더군다나 대학 교육 기회의 제고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이를 넘어선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는 곧 대학의 성격 변화와 함께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의 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현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 혁신체계 구축, 대학 특성화 발전 등의 정책을 연계시켜 추진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 기능 외에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기지이자 거점으로 삼아 특성별 대학육성을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혁신 역량의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를 고려한 특성화를 강력히 지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 발전전략이란 곧 지역별 산업 환경과 발전 여건에 부응한 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발전 전략을 뜻한다. 이는 또한 각 대학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 역사, 인문 사회 분야 및 예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의 대학들은 국내 어느 지역의 대학들과도 차별화되는 특성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협력 방안

대학이 오랫동안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이자 사회에 대한 지식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근래에 대학이 전문 특성화와 경쟁우위를 지향하며,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은 '고독과 자유'(Einsamkeit und Freiheit)라는 전통적 이념에서 벗어나 현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구조 개편과 질적 제고 내지 성숙화를 추구해야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과 국가 및 사회 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지역발전의 전인차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상아탑모델'(ivory tower model)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모델'(regional development model)을 확립하고, 전통적인 국가의 형성자 (nation builders)에서 '지역의 형성자(region builders)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은 양자가 상호작용과 참여, 그리고 연계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휴(collaboration)와 교류협력(cooperation)을 추진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사회로의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의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이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동시에 대학의 존립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고, 지역은 지역발전이 있어 대학의 실용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창조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상호 교류협력과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과 지역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의 성격과 역할 기능 등에서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안영진, 2005: 81).

그러므로 양자 간의 원만한 관계 정립과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 요구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원활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대학과 지연기업과 경제단체, 지역의 행정기관, 보건·복지, 문화·예술, 각종 시민단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정보교환과

각종 자문 및 협의에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거쳐 시설의 공동이용과 투자, 공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인적자원의 교류, 공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이르는, 손쉽고 간단한 일에서 고차의 체계적인 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의사소통과 친분이나 신뢰 관계에서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여 구성원과 관련 부처 간 상호작용, 그리고 부처와 부처 간 상호작용으로 점차 제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양자 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초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이고 수직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나, 상호작용 내용의 변화 추이에 맞추어 쌍방향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안영진, 2005: 81).

이 때 대표적인 지식 창출의 주체인 대학을 산업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작된 산학협력은 국가와 지자체, 기업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의 산학협력은 대학에서 수행되는 각종 산학협력 사업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되어, 산학협력의 양대 주체인 대학과 기업의 쌍방향적인 상호 소통과 산학협력사업의 실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청년이 떠나는 문제, 일자리 부족, 지역 소멸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도권에 대학과 기업이 집중된 결과이지만, 기존의 산학협력이 개별기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등 대학과 기업 간 연결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산업 발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는 빠른 선제적 대응이 필수이며, 이와 함께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가 강조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이순정, 2021: 36-37).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회생과 생태계 변화 없이는 청년 이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를 주도해야 할 MZ세대(20~39세)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쇠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25~34세 청년의 56%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60%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가고 싶은 회사가 다 서울“에 있다는 현실과 “지방에 남아 있는 자체가 소외당하는 분위기“라 는 청년들의 외침이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와 청년 이탈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소멸 예정 지역 86곳을 정해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 없이는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기업의 성장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한 자원 및 혁신역량을 지역기업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 기반의 기업과 대학의 상생 구조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의 발전도 얻지 못한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산업계 수요와 현 교육시스템 간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공 간 융합 또는 대학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더 획기적인 인재 양성 계획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과 연계한 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중심의 디지털 인재가 지역 혁신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이 절실하다. 지역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과의 교육 협업에 동참해야 한다.

대학은 과감한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을 캠퍼스로 유도하고, 기업도 대학의 인재 양성과 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울타리가 쳐진' 대학은 개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도 형식적인 협업으로 끝나기보다는 기업을 캠퍼스처럼 활용하고 현장의 실무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대학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우수사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현안인 인구감소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큰 난제 중의 하나이다. 부산시도 현재 지역대학, 산업계, 지역혁신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순정, 2021: 38-39). 여기에서 우리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 IV. 지역대학 중심 교육 기부 의 과제

### 1. 자율성을 포함한 교육기부의 운영 원리 정립

장신호(2011)에 의하면 교육기부의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기부 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 촉진해야 하므로 정부의 ‘조절’ 기능과 예산 확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공급자 및 수요자를 모두 고려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기부 참여 주체인 산·학·연 각 기관들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에 바탕을 둔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민희, 2018: 654 재인용).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해 평등, 자율 등 어떠한 가치가 추구되어야 하며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정립 과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교육기부는 다양한 주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체들의 자율, 자발적 참여하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들과 운영체제를 정립해 나가는 것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대학과 단위학교, 공공기관의 주체와 민간기관의 참여자 간의 역할에 대한 자율과 조절의 균형을 포함한 운영 원리 정립이 필요하다.

### 2. 교육기부 참여자 확대

지역 대학의 참여하는 교육기부 관련 사업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체계화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교육기부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인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세대구성의 변화를 고려하고 대학교육의 한 축인 평생교육 대상자들로 교육기부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박인중 외(2011)는 베이비 붐 세대인 4050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대비한 생애 재설계, 자립역량 강화, 사회공헌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교육기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대학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두 축을 담당하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대학이 이 방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위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세대 간 지혜나눔 사업,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제3세대 하모니 사업처럼 대학의 구성원이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모여있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지역 대학이 기능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학생 및 대학 구성원 외에도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직 유형별 인력풀을 구축하고 ODA 전문가를 양성하여 개발도상국 인력지원에 과학기술과 교육경력 은퇴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국외적 기부 활성화를 포함한 교육기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용규와 송용찬(2011)의 교육기부 참여자에 대한 구분과 각 집단별 필요한 방안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집단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중산층집단은 재능기부 내지는 시간 기부에 초점을 둔 활성화 전략, 일상적 소비생활과 연계된 기부문화 조성 방안으로 온라인 기부 방법, 쉬운 나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적극적 중산층집단에게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능기부 방안으로 프라보노, 소속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기부 활성화, 세제 혜택의 다원화, 기부자 부담 온라인 기부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소극적 부유층 집단에게는 기부시물레이션 등 다양한 기부 정보의 제공과 기부 체험학교의 설립, 기부자 조언 기금 등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부유층 집단에게는 기부전문가에 의한 기부 자문의 제공, 유산계획 등 기부방식의 다양화 방안 마련, 명예의 전당과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애주기별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도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기는 기부교육과 기부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 쉬운 기부를 통한 기부의 내면화 방법이 가능하며, 초기 직장인은 납세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기부 방법과 기부 정보획득 경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중후기 직장인은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의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기부 분야별 브랜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은퇴자 대상으로는 기부 혜택의 부여, 유산기부계획이나 계획기부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 3. 늘봄학교의 연계된 교육 기부 운영 대학체제 정립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일선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과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이 때 늘봄학교의 추진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의 통합



뿐만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늘봄학교의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이는 늘봄학교의 관리주체를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운영모델 역시 표준화된 운영모델이 아닌 지역과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결과적으로 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늘봄학교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재훈, 정창호(2018)는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파편적·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 돌봄 체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초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성희(2023)는 COVID-19로 인해 학교가 지금까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늘봄 학교 정책 추진의 개연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 중 '돌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 2022; 52 재인용).

교육기부 시스템이 지역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기부가 녹아들 수 있는 지점은 늘봄학교로 구현될 필요가 있고, 교육기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서 각 거점대학은 교육기부의 중심 허브가 되어 교육기부 운영 공공기관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부와 늘봄학교는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 투입되는 예산의 공공성, 학교라는 공적 시설의 활용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가 그 수혜 대상임을 고려할 때 공적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 사업의 결합된 운영 역시 민간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전문적이면서도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공공 기관이면서 지역의 거점이 되는 지역 대학이 되어야 한다.

#### 4. 지역대학 중심 지자체-교육청 컨소시엄 운영

현재 교육기부 사업에 관련된 주체는 지자체, 교육청, 단위 학교, 대학, 지역 사업체 등 다양하다. 이 관련 주체 및 기관이 협력해서 이뤄내는 사업이 교육기부 사업임에는 명확하나, 어떤 주체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핵심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이끌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일례로 교육청이 주요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각 단위 학교의 사업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운용에서도 추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기관이 학교 교육의 기부와 돌봄을 연계하고 이를 관심 있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이 주관할 때와 동일한 문제에 부딪힐 여지를 남긴다.

이에 지역의 거점대학이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과 학교 현장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관련 주체들을 컨소시엄으로 묶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로 적합할 수 있다. 이럴 때 학교는 교육기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되어 운영될 때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직할 조직이 아니고 대학의 독립적 법인 사업단으로 설치되면, 이 사업단이 관련 인력을 고용하여 일정 부분 공적인 채용 구조와 근로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교육청과 지자체는 직접 고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아가 대학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라는 인력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교육기부 관련 사업과 늘봄 사업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 체제가 구축되어 학교의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 학교, 지역의 여러 사업체 등을 연계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3).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9.
- 김민희(2018). 교육기부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653-660.
- 김성희(2023). 학교의 관점에서 본 늘봄학교 시행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356. 15-19.
- 김은영, 이강이, 정정화 (2016). 초·중고 학부모의 교육기부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597-617.
- 류장수(2012). 지방 국·공립대학의 위기와 발전방안. *대학교육*.
- 안영진(2005).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71-89.
- 어윤경, 황여정(2019). 진로탐색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교육연구*, 33(2), 1-18.
- 우원석, 신정순, 임예진(2015). 교육기부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경제연구*, 30(1), 277-294.
- 이건, 이석민(2021). 교육기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준실험방법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1). 51-75.
- 이순정(2021).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위기 극복할 돌파구 마련해야. 부산개발포럼.
- 이현(2022).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자치구 지원체제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정숙희, 신은유, 이주은(2020).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231-257.
- 정재연, 윤금주, 강은영, 채준원(2022). **지산학 협력 적용분야 확대방안 연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 2022-06.
- 정재훈, 정창호(2018). **교육, 가족, 사회적 관점에서의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조대현, 임은정(2021). 문화예술형 교육기부 컨설팅단 운영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19(3), 111-129.
- 최영출 외(2016). **교육기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충북대학교.